

"규제개혁위원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논의하라"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1.09.10 11: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제대로 된 시행령 촉구
규제개혁위원회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
"반쪽짜리 법 제정도 모자라 시행령으로 기업 편드나"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1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1인시위를 이어간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본과 기업의 입김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 7명(가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으로 이뤄진 위원회로, 오늘 오후 2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벌법 시행령안을 두고 기업과 자본가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깍뎂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가 누락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 최근 광주시 학동 건물 붕괴사건과 가슴기살균제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원료·제조물의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과 노동자들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들은 반쪽짜리가 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서도 “반쪽짜리지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법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며칠전 7번째 용균이 재판에서도 사측은 원청의 지시없이 하청직원들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 없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의 부당한 아픔을 폭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한빛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는 대부분 죽음의 외주화로 내몰려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직종에 몰려있으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한 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위한다는 법마저 기업에 의한 살인을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할 수 없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는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위험물질을 잘 관리하고 가해기업들이 기본적인 법을 지켰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그동안 겪은 여러 사고,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슴기살균제의 원인이 됐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 등 시민재해를 발생시키는 원료와 제조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관련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들을 또다시 참사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119 대표는 “현행 시행령에는 직업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24개 항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처벌 대상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수도 약 45000여종이며, 매년 300~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다. 유럽국가 기준으로 보면 산재사망의 97%를 직업병이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는 산업재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당

연히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날마다 부고소식을 접한다. 8일 의정부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구로구 아파트에서, 9일 서울지하철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후퇴된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법의 적용대상을 전체종사자와 사업장으로 명확히 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계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통계에 누락된 산재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의 다치지 않고 죽지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람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한 빛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윤근 직업성·환경성119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가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람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